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특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00-21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해명에 그친 내곡동 사저..의혹 규명은 뒷전

지난해 10월 불거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한 기사는 10~12월 석달 연속으로 노사편집위원회 회의에 오를 정도로 불공정보도 논란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진 주제였다.

10월9일 한 주간지의 보도로 시작된 내곡동 사저부지 관련 기사는 시기적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겹치면서 선거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야권에서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에 불법 의혹이 있다면서 연일 공격을 퍼부었고, 여권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는 의혹을 적극 해명하며 야당 의공세를 피해가는 태도를 취했다.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진 이틀 뒤인 11일 아들 명의였던 사저부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밝혔고, 17일에는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편집위 회의에서 노측은 관련보도가 전반적으로 의혹 제기를 소홀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편집위 회의에서 노사 간 대화록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노조의 '공정정보'에 실렸던 회의 요약본을 다시 실는다.

■노측 = 청와대 관련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을 가늠할) 상징성이 있는 기사다. 그런데 최근 내곡동 사저 관련 논란에 대한 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의혹 제기에는 소극적이고 해명은 적극적이지 않았나 싶다. '기사는 역사의 기록'이란 맥락에서 제기된 의혹들 중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내용은 따져보고 정리해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데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주간지가 의혹을 제기한 뒤인 10월 9일 첫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李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내곡동으로 이전'이었다. 관련 박스기사는 '〈靑〉 대통령 '내곡동 사저' 경위 설명'이었다. 의혹이 일고 있다는 분위기는 전혀 없고 단지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는 뉘앙스의 제목들이다.

이튿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

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내곡동 사저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 됐다. 애초 오전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기사는 길쭉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첫 기사가 나왔다.

기사들이 전반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면서 해명도 충실히 실어주면 되는데 논란 자체는 무엇인지 제대로 다루지 않고 해명에만 쏠리니까 청와대 해명 창구 같은 인상을 준다.

■사측 = 사태 초기에는 사안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지금도 부동산 실명제 위반인지, 불법 증여인지에 대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을 다루면서 갖고 있던 편집기준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해명도 듣지 않고 쓰긴 어려웠다.

문제는 이것이다. 선거를 치르면 이런 저런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경험상 그런 의혹 중 시간이 지나면 과장됐거나 허위인 것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 사안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많았다. 정치권이 공방을 벌일 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기준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 후보측에 똑같이 적용됐다. 기사를 보면 알 것이다. 우리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사안에 대한 검증엔 한계가 있다. 다만 공당이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은 팩트로서 소개해줬다.

■노측 =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내곡동으로 이전한다는 식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목을 달아선 안된다고 본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될 것이란 느낌을 표시를 내줘야 한다.

박스기사 제목도 '경위를 설명했다'가 아니라 '무엇이 논란인가'라든가 '해명 폭로 엇갈려'라고 달아야 사실을 더 정확히 전달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일부 기사는 사안에 대한 해석에서 너무 어이가 없다. 내곡동 이전을 백지화했다는 박스기사에 '정면돌파', '일단락' 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인 흠결이다.

'논란이 일단락될지 모르겠다'라거나 '청와대가 일단락을 기대한다'고 쓰

면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다.

■사측 = 기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쓴 것은 아닐 것이다. 일단락 됐다고 기사 쓴다고 일단락될 사안도 아니다. 표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청와대는 일단락을 기대 또는 시도한다고 썼으면 좋았을 것 같다. 예민한 부분은 표현상 좀 더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

■노측 = 10년 뒤 후배나 일반 독자들이 '내곡동 사저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의혹이 뭐였지'하고 우리 기사를 검색해 보면 여야 대변인들의 주장만 있을 뿐 사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 기사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후대에 언론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측 =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유념하겠다. 다만 이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복잡한 사안의 경우 잘 정리했다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굴러가는 흐름을 나름대로 정리하긴 했는데 2~3년 뒤에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봤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수적으로 임한다. 그렇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지적은 유념해서 편집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기사는 11월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또다시 안전에 포함됐다. 김인중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연합뉴스가 뒤늦게 기사화하면서 미흡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었다. 이 언론은 내곡동 사저 매입 부지가 이 대통령의 승인 아래 결정됐다는 김 전 처장의 발언을 담고 있었다. 사측은 김 전 처장의 발언이 새로운 팩트가 아닌데다 청와대 해명만 더 신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의 발언이 '새로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12월 편집위원회에서 한차례 더 토론이 이뤄졌다. 다음은 12월 '공정정보' 요약본이다.

■노측 = 우선 송고 시간부터 문제다. 작성부터 송고까지 무려 18시간이 걸렸다. 제목도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인중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인터뷰 내용도

당초 작성기사로 올라왔던 것이 축약돼 기사 뒤쪽에 붙었다. 설명이 필요하다.

■사측 = 신동아 인터뷰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청와대팀에서 일단 기사를 올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동안 청와대가 해명 했던 것과 똑같았다. 다른 대목은 명의를 아들로 하자는 것, 그리고 경호처장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만 새로운 내용이었다고 한다.

오히려 해명만 해주는 기사라고 판단해서 내보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나왔다. 토요일이었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오전에 여야 반응이 나오는데로 공방 기사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야당은 논평을 냈지만 여당은 얘기가 안된다고 논평을 안 냈다. 그래서 늦어졌고 결국 민주당 입장을 위주로 기사가 나왔다.

■노측 = 청와대 해명과 다른 게 이명박 대통령이 미리 알았다는 점이다. 김인중 처장이 건의했다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한국 국민 서울 세계 동아 한겨레가 썼는데 다 제목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이 사저를 오케이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해명이 뒤집힌 것이다. 그동안 연합 기사는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김인중 기사를 보면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방문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새로운 팩트였다.

■사측 = 대통령이 당연히 알았고, 따라서 대통령 책임이라는, 이런 부분이 청와대에서는 다 나온 얘기였다는 것이다.

또 동아일보의 경우 자기네 잡지인 신동아에 나온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자에 게재하지 않았다. 나중에 월요일자에 쓴 것이다.

■노측 = 일반적인 상식으로, 또 청와대 출입기자들이야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해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대외에 기사로 알려진 것은 대통령은 몰랐다는 투였다. 그 점에서 김인중 인터뷰가 기사로서 소재가 되는 것이다.

■사측 = 이미 알려진 얘기라고 해서 초기 야간 상황에 늦었고, 그 다음날 오전에 여야 공방으로 묶으려 했지만 안됐다. 상당히 늦어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새로운 내용인지는 한 번 평가해 봐야 한다.

헐... 연합뉴스 기사 위에 사장 있다?

단독기사 '죽이고' 체면 세우나

박 사장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말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유명한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회의장에서 기다리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민주당 천정배 의원에 대해 “왜 들어와 있어 미친놈”이라고 주변에 속삭였다.

이 발언은 국회 내부방송으로 생중계됐지만 몸싸움 소동에 묻혀 자세히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톤이 미약했다.

연합뉴스 정치부 담당기자는 이 대목을 정밀하게 확인해 단독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킬됐다.

옛새 뒤 타사가 이를 특종으로 다뤘다. 이 사안을 두고 여야는 한동안 흥역을 치렀다. 그만큼 휘발성 있는 소재였다.

연합뉴스는 이를 물먹은 기사로 처리하는 수모를 당했다.

제보에 의하면 “연합뉴스 기사가 킬된 뒤 박 사장은 유 장관에게 ‘우리 연합의 위력을 알겠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박 사장은 이 기사가 송고되지 못한 경위를 해명하라.

'고교동문 위원장' 과거사위 비판기사 압박

사회부는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취재했다.

상임, 비상임 위원 3명이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려고 7박9일 간 출장을 떠나는 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 미신청인 대책 등 현안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큰 비중없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데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있었던 것이다.

유족단체가 비난성명을 내어 크게 반발하고 위원회 조사관들도 이를 문제 삼았다.

당시 위원장인 이영성(경희대 교수) 씨는 설명을 듣기 위해 기사가 전화하자 강하게 반박하면서 기자의 신원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는 박정찬 사장의 대구 계성고 1년 후배다.

결국 이 기사는 출고되지 않았다.

제보에 따르면 “사장실에서 사회부로 전화해 기사가 킬됐다”고 한다.

박 사장은 직접 사회부에 압박을 가해 고교 후배가 위원장인 단체에 대한 비판 기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해명하라.

김승연·신정아 사건 특종도 사장될 뻔

박 사장은 특임이사 시절인 2007년 사회부 사건팀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신정아 학력위조 특종에 대해서도 역시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주

문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두 건의 특종 기사를 왜 쓰지 말아 달라고 했는지 해명하라.

'포항 향우회' 행사에 기자 급파

2010년 8월 한국미래청년포럼이라는 단체가 독도에서 '세계 대학생 축제'라는 행사를 개최한다며 3박4일간 사회부 기자 2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사회부는 인력사정을 고려해 1명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정체불명의 단체는 포항향우회, 포항지역 학교 동문회, 고려대 출신 인사로 구성돼 있었다. 준비한 행사도 엉망이어서 도저히 기사를 다룰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독도에서 20분간 정박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한 것이 행사의 전부였다.

외국인 참가 대학생은 통제되지 않았고 회장을 비롯한 40~50대 남녀들도 여기저기서 술판을 벌였다.

나중에는 출장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행태도 보였다는 제보가 있다.

행사 현수막에는 포항시와 연합뉴스가 후원으로 적혀 있었다.

연합뉴스가 왜 이런 행사를 후원했는가. 사장은 해명하라.

"박 사장이 돋보이게 기사 작성하라"

2009년 6월 초 정치부 작성화면에는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담 기사 쓸 때 박정찬 사장님 기사를 돋보이게 하

라는 편집회의 지시가 벌써 내려갔는데 어젯 밤 기사를 보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다.

문제가 된 한.아세안 정상회담 기사는 다음과 같다.

李대통령 “한.아세안 세계경제 큰 몫 할 것”

연합뉴스 박정찬 사장 등 귀빈, 정상 환영만찬 참석

회사 선전 행사도 아닌 일반 소재의 기사에서 이게 타당한 지시인가. 해명하라.

정보보고를 존댓말로 하라니..

2009년 6월 정치부의 작성기사 창을 보면 “정보보고는 반드시 존댓말로 표현. ‘했음’ ‘보였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보였습니다’로 통일”이라는 부장 명의의 전달사항이 있다.

이런 지시는 같은 해 5월에도 두 차례 발견된다.

정치부장은 기사 작성창에 “정보보고를 할 때 꼭 관계자의 소속, 직함을 함께 써주기 바랍니다. 윗분들은 그 사람 직함을 잘 모르고 부장에게 묻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그리고 반말조로 하지 말고 경어체로 하도록..”(5.28)

“정보보고 작성시 존댓말로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5.26)

정보보고를 ‘윗분들이 보시므로’ 경어체로 해야 한다는 것은 군대에서나 가능한 일테다.

정보보고가 반말체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아랫선’이 알아서 한 일인가. 박사장은 해명하라.

뉴스Y도 슬슬 편향 조짐

춧불집회 장면이 꼭 필요한 리포트조차 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지난 특보가 발행된 뒤 뉴스Y의 편향보도에 대한 제보가 이메일과 구두로 답지했다.

뉴스Y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제보한 편향 조짐은 이런 내용이다.

한 조합원은 “박원순 시장 관련 리포트나 KBS 새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단신 리포트를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빠졌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심층 인터뷰도 여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전문가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대담을 하는 코너가 많은데

평소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성향의 전문가를 섭외했다가 ‘윗선’의 지시로 부랴부랴 출연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Y가 개국한 작년 12월1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장시간 내보낸 것도 모자라 이튿날 편집한 인터뷰를 또 내보내기도 했다.

방송뉴스는 기사 송고에 물리적 제한이 없는 통신기사와 달라 한정된 시간 안에 기사를 선별해 내보내야 한다.

이런 특성 탓에 방송뉴스의 편향성을 가려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최근 해고된 MBC 박성호 기자도

인터뷰에서 “기사를 만들라 해서 하루 종일 만들고 나면 방송 직전인 8시께 빠지곤 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표현을 꼬아서 심하게 왜곡하면 대판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지만, 새 뉴스가 치고 들어와 빠졌다 하면 항의하기도 그렇다”고 말한다.(한겨레 3.8일자)

특정 리포트가 비보도된데 대해 “다른 중요한 뉴스가 있어 밀렸다”라는 해명을 하면 편향성을 비판하기 애매해지곤 한다.

지상파는 정권 비판 리포트가 9시 정치뉴스에서 아무 이유없이 빠지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뉴스Y처럼 24시간 보도채널은 이런 보도를 시

청자가 적은 심야에라도 한두차례 정도 내보내면 편향성 비판에 면피로 삼을 수 있다.

뉴스Y가 ‘연합뉴스가 만드는 뉴스’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고 상당수의 연합뉴스 기자가 파견 근로하는 만큼 뉴스Y의 불공정 보도는 연합뉴스와 불가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뉴스Y의 보도 편향도 엄중하고 세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뉴스Y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박정찬 사장은 실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편향 보도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명해야 옳다.

“사장님,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ㅠㅠ”

20여 년 전인 1990년 박정찬 사장은 서기원 당시 KBS 사장의 퇴진 투쟁에 참여했다.

회사 선배들에 따르면 박 사장은 그 한 해 전인 1989년 연합통신 파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낙하산 사장 반대, 편집권 독립 등을 요구한 파업이었는데 박 사장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런 박 사장이 최근 사내게시판에 올린 ‘대화를 거듭 호소합니다’란 글은 전혀 다른 사람이 쓴 글 같다.

“뉴스통신사의 파업은 마치 용광로의 가동을 멈추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박동해야 하는 뉴스공장의 심장이 멈춰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낙하산 사장 반대에 앞장섰던 박 사장이 오늘날 사원들의 거센 연임 반대 여론에 부닥쳐 있다는 점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노조 사진첩을 뒤적이다 발견한 또한 장의 사진도 입가에 묘한 웃음을 띠게 한다.

편집국장을 지낸 박노환 국제업무상무가 머리띠를 두른 채 가두 행진을



1989년 편집권 독립과 낙하산 사장 반대 등을 요구하며 진행된 연합통신 파업 당시 조합원들이 ‘편집권 독립 쟁취하여 민주통신 앞당기자’ ‘편집국장 직선제로 민주언론 쟁취하자’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 앞사람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편집국장 직선제로 민주언론 쟁취하자”라고 적혀 있다. 당시 노조의 요구가 관철됐더라면 어땠을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저절로 저런 궁금증이 일게 하는 사진이다.

연합뉴스 23년 만의 파업투쟁 임박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23년 만의 파업 투쟁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일정으로 파업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 홈페이지(www.newsunion.co.kr) 설문조사란을 클릭하면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해외특파원, 단기특파원도 투표권이 있다. 해외연수자와 휴직자는 제외한다.

가결 요건은 조합원 재적(504명) 과반수 찬성이다. 하지만 파업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강고한 의지를 다지려면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KBS 새노조는 파업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재적1064명 가운데 963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90.5%) 찬성률

89%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가결됐다. 재적인원의 80%가 파업에 찬성한 셈이다.

MBC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83%에 찬성률은 69%로, 재적인원 대비 57%가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7일 연합뉴스 노조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집행부는 13일 파업 찬반투표 개표 결과 가결이 될 경우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아울러 9일 저녁 7시30분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연합뉴스 조합원들의 장기자랑과 퀴즈풀기 등으로 진행된다.



박정찬 사장이 1990년 연합뉴스 노조가 동참했던 서기원 당시 KBS 사장 퇴진 투쟁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국가기간통신사 사장의 ‘황당어록’ “연합뉴스 인사를 방송 기준으로” · “통신 콘텐츠 약화 불가피”

박정찬 사장은 언론사, 국가기간통신사의 최고경영자라고 믿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왔다.

박 사장은 보도채널 관련 설명회를 통해 “앞으로는 연합뉴스 인사를 방송 기준으로 하겠다. 통신 콘텐

츠가 약화되는 것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한다고 해도 연합뉴스 최고경영자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방송을 연합뉴스 인사의 잣대로 삼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인사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통신 기능 약화 현상도 심각하다. 외부에서 연합뉴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 가장 큰 부분도 불공정 보도와 통신기능 약화다.

박 사장은 또 지난해 광고주 초청 설명회 등에서 “언론은 정치권력, 자본권력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주먹구구 방송 진출..지역본부 죽어나

뉴스와이 개국으로 지역본부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통신 기능은 크게 저하됐다.

한 지역본부는 방송 개국 후에도 취재차량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했다. VJ가 방송취재로 한 대뿐인 취재차량을 타고 가면 기자들은 개인차로 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파견직 VJ에게 개인차를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

지역본부는 대체로 담당지역이 서울보다 훨씬 넓어 가까운 현장에 다녀와도 이동거리가 100km 가깝게 나온다. 특히 현장에 가야만 하는 사진 기자들은 자신이 직접 기름값을 들이며 취재하는 꼴이 됐다. 비록 배차실이 없어도 뉴스원, 뉴시스, 노컷뉴스도 회사 취재차로 이동하는데 방송 업무가 없어지면서 국가기간통신사 기사가 이들보다 못한 업무환경에 처하게 됐다.

방송 업무는 또 결과물 대비 투자시간이 너무 많다. 리포트 제작은 최소 한나절 이상의 촬영 시간을 비롯해 사전 섭외와 기획 등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리포트를 하는 기자들은 담당 출입처를 장악할 시간이 부족하다. 지역 현안을 주도하거나 다른 매체들이 받아들일 만한 기획 기사를 구상할 여력은 더욱 없다. 출입처에서 부탁하는 보도자료 처리에 신경을 쓰기도 어려워 장기적으로 광고 업무에도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사와 사진외에 영상 촬영과 편집, 녹음 등의 업무로 노동 강도가 높아져 지방 조합원들은 만성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빨리 또는 적시에 출입처 기사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데 따른 부담감이 커졌다. 방송에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사고 기사를 처리하지 않아 타 방송사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방송에서 단신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챙겨주지 않느냐’, ‘요즘 우리 회사에서는 뉴시스 검색해보라고 한다’는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모지역본부의 사진기자는 업무과중으로 현장에 갈 수 없어 해당 지역의 담당 취재기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사진을 받아 발행했다. 반나절 후 타사에서 사진 취재를 왜 하지 않느냐고 항의 전화가 왔다. 현장에 갈 수 없어 부득이하게 지자체 사진을 받아 처리했다고 해명하자 돌아온 답변은 “거기 가면 공짜로 주는 사진을 우리가 왜 연합뉴스에 돈을 주고 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였다. 항의를 받은 사진기사는 할 말이 없었다.

어떤 지역본부는 방송 전담자 없이 모두가 방송 제작에 나서고 있다. 방송제작 요구가 많아 통신기자 전원이 방송에 투입된 것이다. 이미 본부는 출입처 개념을 허물고 A기사가 방송 제작으로 온종일 자리를 비우면 B기사가 A기자 출입처의 자료를 처리하는 식으로 통신 업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사진기사가 방송 제작일정이 있다며 사진취재 협조를 킬한 적도 있었다. 방송으로 통신 업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한 지역 조합원은 “연합뉴스가 방송을 시작한 뒤 통신기사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불평을 타사 기자들로부터 종종 듣는다”고 말했다.

“방송출범뒤 통신기사 약해졌다”

통신업무를 소홀히 하며 영상뉴스를 만들어 본사에 보내지만 ‘지방시대 뉴스 방송’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 개국 초기 <강소기업> 기획아이템을 취재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도 해당 아이টে은 방영되지 않았다. 아이টে을 모아둬야 한다며 계속 취재만 시킨다. 실컷 고생해 방송용 뉴스를 제

작성해 서울에 올려도 제시간에 방영되지 않는 것이 많다. 무한정 미뤄지거나 아예 방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취재원으로부터 언제 방송되느냐고 수차례 질문을 받지만 꿀 먹은 벼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연합뉴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지역본부는 방송 출범 전 방송 전

담 1명과 부전담 1명을 지정해 방송을 준비했다. 그러더니 개국 후 인력충원도 없이 갑작스럽게 방송 전담기사를 서울로 발령냈다. 부랴부랴 방송요원을 교체하는 혼란이 빚어졌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으나 모두 사건팀이라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인력이 없어 출입처 조정도 못하는 실정이다.

파업 Q&A

23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전사적 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의 궁금증이 많다. 조합원들이 알고 싶어할 만한 내용을 모아 정리했다.

-파업기간 조합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파업하면 현재 맡은 업무를 중지하고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됩니다. 쟁의대책위원회는 파업 시 노조를 이끌 확대 집행부입니다. 타사 사례를 보면 주로 집회·시위, 자유시간 등으로 진행됩니다.

-파업엔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나요?

▲투표 결과 파업 투쟁이 가결되면 원칙적으로 파업 찬반 의사와 관계 없이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파업을 반대하는 조합원의 파업 참여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타사의 경우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박탈하는 내부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또, 노사협약에 따라 전산 등 일부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근무합니다.

-파업 시 월급은 나오나요?

▲파업을 하면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측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업이 합법이나 불법이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파업이 타결되면 미지급분을 지급해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몰릴 경우 처벌받나요?

▲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에 인 사상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징계 조치 등은 주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집중돼 일반 조합원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MBC 파업의 경우 사측이 박성호 MBC 기자회장과 이용마 MBC 노조 홍보국장을 해고했습니다.

-파업해서 박정찬 사장이 물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박정찬 사장 연임 저지는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장이 연임을 포기하면 뉴스통신진흥회에서 다시 차기 사장 후보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지요. 노조는 이와 별도로 공정보도 시스템 확립과 합리적인 인사, 사내 민주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하겠지요.